

중 어선 폐지어 단속 방해 식파이프 중무장 폭력 저항 한국 해상 공권력 무력화

# ‘무법천지’ 서해

### “보이지 않는 대퇴부 소라니”...검문수칙 개정 필요

한반도 서남해안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로 인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영해 수호에 나선 해양 경찰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행위를 한 중국 선원들의 저항에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수십척씩 떼를 지어 다니며 쇠파이프와 몽둥이는 물론 칼과 낚, 그물 추 등을 사용, 한국 정부의 해상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경의 장비는 노후화된 데다 총기사용 기준 등 검문·검색 수칙이 현실에 맞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불법 조업 위해 집단화·총기로 생명 위협 예사=지난달 23일 신안군 흑산면 가까도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구타당한 후 풀려난 사건은 불법 중국

어선들의 집단화·세력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중국 어선은 해경 단속에 적발되자 무전을 통해 이를 알렸고, 순식간에 50여척의 어선들이 모여들었으며, 이들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경찰관을 상대로 주로 총기를 휘두르고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신안군 흑산면 가까도 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검문하려고 배에 오르려던 박경조 경위도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로 추락·사망해 중국 선원들의 저항이 날로 공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해경들이 어선에 올라오지 못하게 난간에 미끄러운 비닐 천을 깔아 낚 승선을 방해하는 등 해경의 검문·검색에 날로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불법 중국어선들의 거센 저항은 2년여 전부터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 전까지는 해경에 단속될 경우 벌금을 2천만~3천만원까지 냈으나 지난 2006년부터는 불법 조업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 3천만~5천만원까지 벌금이 2배가량 증가했다. 벌금 부담 때문에도 중국 어선들의 저항이 격렬해진 것이다.

◇경찰관 부상 실재로는 더 많을 듯=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다 벌어진 사고는 총 16차례로, 1명이 숨지고 26명이 부상했다.

또 2006년 6월에는 중국 선원이 단속 중인 경찰관 1명을 흉기로 왼쪽 가슴과 목 부위를 찔러 중상을 입혔고, 지난해 8월에도 경찰관 1명이 중국 선원 4명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다치는 등 폭력 정도가 점차 심각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포해경이 지난달 23일 발생한 경찰관 폭행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에 비춰볼 때 중국어선과의 해상 충돌로 인한 부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문·검색 매뉴얼 현실에 맞춰야=현재 해경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검문·검색 수칙상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상대방의 대퇴부에 사격이 가능하다’라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라는 단속하다 벌어진 사고는 총 16차례로, 1명이 숨지고 26명이 부상했다.

또 2006년 6월에는 중국 선원이 단속 중인 경찰관 1명을 흉기로 왼쪽 가슴과 목 부위를 찔러 중상을 입혔고, 지난해 8월에도 경찰관 1명이 중국 선원 4명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다치는 등 폭력 정도가 점차 심각해 지는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지난달 25일 신안 해상에서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를 숨지게 한 불법 어로 중국 어선(왼쪽)과 이를 단속한 해경 '3003함'이 나란히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정박돼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단속 매뉴얼 재검토...불법조업 엄단키로

### 선박 블록에 깔려 2명 사망

#### 3003함 함장 직위해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경찰청은 1일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해양 경찰관이 폭행당하거나 사망한 최근 사건과 관련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 매뉴얼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 단속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폭행 및 사망 사건과 관련, 단속 장비 및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검문 과정을 집중 검토한 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본청 감찰팀을

목포해양경찰서로 급파해 최근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 문책 등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1일 중국어선을 검문하다 숨진 박경조 경위 사건의 책임을 물어 박 경위가 달던 '3003함' 함장 김도수 경장을 직위해제 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1일 오전 10시5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입단지 내 선박 블록 제조업체 인 D중공업에서 작업중이던 고모(36)씨 등 2명이 선박 블록에 깔려 숨졌다.

이날 사고는 110t짜리 선박 블록 완성제품을 4개의 와이어에 연결, 크레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1곳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발생했다. 고씨 등은 블록 밑에서 작업을 하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무심코 한 전단지 배포 알바 성매매 알선죄 해당된다니”

### 대학생 등 2명 한숨

“전단지 배포가 이렇게 큰 범죄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광주북부경찰은 여성의 반라 사진이 찍힌 출장마사지업소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던 신모(23·전남 모 대학 2년)씨와 김모(23·무직)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검아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달 30일 밤 11시에 광주시 북구 신안동과 임동 유흥업소 일대에서 출장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일당 3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전단지 수백장을 배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와 김씨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

해 사흘 전부터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며, ‘알바××’이라는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신원미상의 업주로부터 전단지 수천 장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에게 전단지를 건넨 업주는 “신안동 J모텔 건너편 공중전화 부스에 전단지를 놔줬으니 찾아가라”는 식의 ‘침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업무연락을 위해 단속망을 피해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무심코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신씨와 김씨처럼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나원침 (7616) 김장두



## 김재균 의원 피내사자 신분 서면 조사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 을)의 채무신고 누락의혹 및 북구의회 의장 뒷돈 선거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1일 중간 수사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국회의원 회관과 주소지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의원 측이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상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이날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면조사를 통해 지난 4·9 총선 당시 김 의원 자신이 지고 있던 개인채무 5천만원과 부인 주모(55·구속)씨가 지고 있던 개인채무 및 금융채무 4억원 가량을 총선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 차장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산신고 당시 채무 누락 행위가 악의적으로 이뤄졌는지 등 어떤 목적으

로 채무를 누락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서면질의에도 불응할 경우 그동안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9월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북구의회 의장 뒷돈 선거와 관련, 구의회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북구의회 의장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 취득)로 구속된 주씨에 대해서는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한 차장검사는 “아직 김 의원이 주씨의 뇌물수수에 개입했는지 등의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소시효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법 위반 의혹을 먼저 조사하고 나서 다른 부분도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 좋은 건국·산업지대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행

▶ 사물번호 : 02) 3445-0943

▶ 사무관행 : 06) 337-0571

판사에 욕설 퍼부으며 법정 난동

○40대 피의자가 법원에서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받던 중 판사에게 욕설을 퍼부고 한동안 소동을 피우는 등 발생.

○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주인을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구속된 박모(48)씨가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영장전담판사인 유승룡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박씨는 유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하면 나와 적이 된다”며 판사에게 고향을 지르고 책상과 집기를 마구 뒤집어 었는 등 한동안 난동을 피우다 배석 경찰에게 제지.

○이에 대해 법원 측은 “박씨가 법정모독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소란이 경미했던 점을 감안해 따로 문제 삼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 시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뮤지컬

시카고

10.3~10.5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CHICAGO